

21대 국회 이것만은 꼭

항후 4년간 강원도를 대표할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확정됐다. 도내 경제단체장들은 이번엔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코로나19로 기업은 물론이고 서민경제와 시민생활까지 전례 없는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강원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최우선으로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도내 주요 경제단체장들에게 이번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바라는 바를 들어봤다.

“전례 없는 SOC·관광산업·서민경제 위기 정상화 대책 우선”

조창진 도상공회협의회회장



코로나19 사태로 질병에 내몰린 강원도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당선자들이 앞장서 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결에 적극 나서 주기를 희망합니다.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후·폐업이 잇따르면서 무급휴직과 실업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결국 국내 경제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장기 저리융자 등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특성상 신용도가 낮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조차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도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앞장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합니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신속한 경기부양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고용유발효과와 파급효과가 큰 건설산업을 활용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생활형 SOC 사업을 위한 예산을 증액, 건설산업을 경기침체의 돌파구로 빼들었습니다. 이에 총선 이후 논의될 추경에서도 SOC 예산을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정부의 각종 부동산규제를 완화해 민간주택시장의 자생 활성화가 이뤄지길 소망합니다. 특히 제2경춘국도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등 인프라 건설사업이 안정적인 추진될 수 있도록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예산을 꼭 확보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적정 공사비 확보와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요청에도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금선 강원발전경제인협회장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전의 국회의원 선거와는 사뭇 다르게 국가적, 더 나아가 세계적 재난인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졌기에 도민들의 기대와 바람이 더욱 간절하게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지나친 이상주의와 극단주의로는 강원도를 정상적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열과 혼란을 자초할 뿐입니다. 군립하는 정치가 아닌 도민의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정치인이 돼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두루두루 귀를 기울여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고 재난 수준으로 타격을 견뎌 줄 위기의 해결책을 고민하며 도민의 삶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21대 국회의원이 되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천세복 도관광협회장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내 모든 경제활동이 어려워 현 시점에서 당선자에게 거는 기대가 큼니다. 특히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강원도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다수인 국내 여행사를 비롯해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 등이 극심한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관광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과 설악권 관광경기 회복, 양양공항 활성화 및 오색케이블카 사업 재개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당선자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관광객의 지역성권 체류기간을 확대할 인프라가 구축되길 희망합니다. 도내 관광업계도 당선자와 합심해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서상건 강원상인연합회장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되살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지역 관광산업의 기반인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줄여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부채 탕감 또는 감면 정책을 요청합니다. 소액자본을 활용한 창업프랜차이즈 육성지원책도 마련돼야 합니다. 대중적인 떡거리의 위생·안전·품질·관리를 확보한다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다양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수익 창출과 직결될 것입니다. 또 간이과세과표구간을 현행 연매출 4,8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상향조정해 줄 것을 바랍니다. 또 각종 소분·전기시설에 대한 상인의 자부담을 인하여 전통시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광객 및 지역민의 이용률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최대 현안 방사광가속기 유치 힘 모아야”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바란다

내달 초 선정지 발표 협조 시급
제2경춘국도 노선 확정 등 산적
코로나 극복 경기 회생도 과제

선거구 확정 과정에서 춘천·철원·화천·양구갑과 을 선거구로 분할된 춘천의 최대과제는 방사광가속기 유치다. 춘천시와 강원도는 남춘천산업단지에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하기로 하고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달 말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고 내

달 초 발표, 평가를 거쳐 곧바로 대상지가 결정되는 일정이어서 두 당선자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현재 방사광가속기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도시는 춘천을 비롯해 전남 나주, 충북 청주, 경북 포항 4곳이다.

다목적방사광가속기는 2022년부터 6년 간 1조원대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슈퍼 현미경으로 불리는 다목적방사광가속기가 유치되면 신약 개발은 물론 에너지,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산업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가 주산한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통한 경제 유발효과는 생산 5300억원, 부가가치 3400억원, 일자리 창출

규모 9100명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방사광가속기 유치 선언을 시작으로 '춘천시-강원도-강원대학교' 3개 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16일 오전 11시 강원도민일보 주최로 춘천스카이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화합 교례회 및 공약실천 다짐대회'에서 지역 당선자들에게 현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재수 시장은 “수도권과의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춘천시는 그 어떤 도시보다 우위에 있다”며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갑과 을 선거구 당선자 두 분에게도 힘을 보태달라고 부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제2경춘국도 노선 확정 및 조기 착공, 의암호를 중심으로 한 물의 도시 봄내 조성, 국립전문과학관 유치, 레고랜드 관광객 유입 극대화 방안, 교통·조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체외진단 산업화 플랫폼 구축도 두 당선자와 힘을 모아야 하는 사안이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기를 되살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윤현영 춘천시번영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휴·폐업 업체가 속출,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ipgus@kado.net

정당 초월 지역 밀착형 ‘협치’ 한 목소리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바란다

2명 당선자 간 소통·협력 기대
‘강원리딩시티’ 고른 발전 희망
구도심·전통시장 활성화 과제

원주시민들은 무엇보다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정당을 떠나 2명의 국회의원 당선자 간의 소통과 협력은 물론 원주시, 강원도와의 ‘협치’를 토대로 매 선거마다 제시되는 원주목표지향적인 ‘중부내륙 대표 도시 성장’을 조기 완성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혁신·기업도시 등 신도심의 온전한 완성은 물론 구도심 회생, 전통시장 활성화, 교육·보육환경 개선 등 ‘강원리딩시티’에 걸맞은 전반적 고른 발전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혁신도시는 12곳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등 외형적 완성은 이뤘으나 활성화까지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실거주가 낮아 주말 또는 야간이면 텅빈 도시를 방불케 하고 있다.

기존도심과의 거리감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률도 미미한 실정이다. 때문에 혁신도시에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도출된 문제점들을 여건에 맞춰 해결하는 지역 밀착형 ‘협치’에 먼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도시는 교통·교육·여가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수기업을 지속 유치해 완성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또 갑, 을 지역 양분이 아닌 ‘협치’, ‘연계’를 통해 혁신·기업도시를 상생 발전시키고 그 효과를 원주 전역으로 확대시켜 줄 것을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신도심 개발에 따른 구도심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전통시장 활성화는 매 선거 등장하는 단골과제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난제다. 이 역시 ‘협치’를 토대로 원주시가 구상 중인 해법의 완성도를 높이거나 다양화 아이디어 정책을 접목해 이제는 체감도 있는 진척을 이뤄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거내내 당선자 저마다 제시한 수많은 공약의 성실한 이행도 주문하고 있다.

김동훈(43·반곡관설동)씨는 “선거가 끝나 수많은 공약으로 부풀었던 지역발전 ‘꿈’이 끝났다는 기존의 ‘허무한 선거공식’이 아닌 선거가 끝나 지역발전 ‘꿈’이 이제 실현된다는 새로운 ‘희망의 선거 공식’이 쓰여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태욱 tae92@kado.net

“지역발전 청사진 모을 화합의 리더십 필요”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바란다

갈라진 민심 수습·통합 필요
관광·서비스업 경기 활성화
SOC 과제 주요 임무 손꼽아

강릉에서는 다자구도 선거전이 치열했던 만큼 어느때보다 많은 공약이 쏟아졌다. 제2혁신도시 유치와 강릉~고성제진동해북부선철도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조기 건설, 수서~강릉 고속철도 조기 개통, 해양

국가정원 추진, 국제관광특례시 지정 추진, 옛도심권 도시재생사업 등의 공약이 봇물을 이뤘다.

지역인사들은 “6명의 후보의 공약에 강릉발전 고민과 과제가 모두 담겼다”며 “치열한 선거전을 거쳐 여의도에 입성하는 당선인이 본인의 공약은 물론 타 후보들이 내건 공약도 면밀히 살펴 지역발전 청사진을 완성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사회에서는 특히 코로나 19 신종 바이러스 여파로 주력산업인 관광·서비스업계와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막심한 만큼 우선 관광·서비스 경제를 새롭게 일으키고, 공공

기관 및 기업 유치와 동해북부선 철도조기건설 등 SOC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임기 4년간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꼽았다.

김형익 강릉상공회의소 회장은 “선거로 분열된 지역 민심을 하나로 묶어 화합에너지를 창출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동해선과 수서선, 강호축(강릉~충정~목포) 등의 철도 연결에 따른 강릉발전전략 수립, 옥계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경포 특구 개발에 당선자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최중봉 강릉시번영회장은 “관광거점도시~강릉” 완성을 위해 경

포 일대 특구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관광 파급효과가 시내 전지역으로 고르게 분산되도록 정치와 행정 이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인구 증가 해법을 찾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순희 강릉여협 회장은 “활력 넘치는 관광거점도시 건설과 옛도심권 경제 재생 등의 과제를 해결하고, 2018년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에너지를 디딤돌 삼아 머물고 싶은 강릉, 행복한 강릉의 신기원을 열어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견을 들어 모두를 아우르는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연재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바란다

동해신항 정부투자 전환

동해 동해시는 동해신항 개발 사업 잡화부두 민자유치의 정부 재정투자 전환과 폐교된 한중대의 활용 대책 등 굵직한 현안이 산재해 있다. 이같은 현안은 지자체의 힘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제21대 국회에 입성할 국회의원의 역할이 어느때 보다 중요하고 절실한 상황이다.

동해신항잡화부두민자유치사업은 정부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잡화부두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업체가 없어 잡화부두 건설사업 자체에 적신호가 켜졌다. 동해신항 3번 선석인 잡화부두는 2131억원을 투자해 2023년 12월 준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동해상공회의소가 동해신항잡화부두민자유치사업 무산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동해해양수산청 등에 건의문을 발송, 정부 재정투자를 촉구하고 나

잡화부두 사업 대책마련 호소 폐교된 한중대 활용방안 시급

서는 등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18년 폐교된 한중대의 활용방안도 지역사회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이다. 한중대 폐교로 인구 급감과 그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는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한중대의 활용방안에 대해 동해시도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중이지만 현재로는 뚜렷한 대안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역사회에서는 폐교된 한중대에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이전, 국립 훈련원과 해양관련 기관 유치, 보훈병원과 간호학과를 중심으로 한 대학 유치 등 여러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국회의원 당선자의 대책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이재용

제천~삼척 고속도 착공

삼척 삼척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제천~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개통 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다. 서해와 동해를 잇는 동서6축 고속도로는 지난 1997년 착공한 이후 18년만인 2015년 평택-제천 구간(127.3km)만 연결된 이후 나머지 제천-삼척 구간(123.2km)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남은 미개통 구간은 삼척뿐 아니라 영월, 정선, 태백 등 도내 자치단체의 오랜 숙원이지만, 공사비가 4조 7000억원에 달해 경제성보다는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정부의 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남부발전 LNG 발전소 3·4호기 유치와 동해선(삼척선) 대체노선 신설, 광산지역 생태계 구축, 남북경협대비 광업연구단지 조성, 국립 해양문화재연구소 분소 유치 등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이

LNG 발전소 전력수급안 확정 동해선 시외곽 대체노선 신설

중 남부발전 LNG 발전소 3·4호기 유치의 경우 전력수급 계획만 결정되면 즉시 사업 시행이 가능하므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 현안사업이고 동해선(삼척선) 대체노선 신설은 삼척~동해(12.9km)의 기존 노선을 시 외곽(도경역쪽)으로 연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삼척 오분~동해지흥우회도로 개설, 삼척도경~동해단봉 도로 확·포장, 도계신리~원덕월천 도로 확·포장, 미로~하장 댓재 구간 터널화 사업, 하장대전~장전 2차로 시설 개량 등 주요 SOC 확충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당선인의 관심도 촉구된다.

구성민 koo@kado.net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바란다

“용문~홍천 철도 유치”

홍천 “홍천지역 30년 숙원 사업인 용문~홍천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 바랍니다.”

홍천주민들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가장 먼저 바라는 것은 용문~홍천 철도 유치다. 주민들은 홍천서 기자타고 서울가는 세상을 꿈꾼다. 이때문에 군 변영회는 모든 후보자들에게 제1공약 채택을 요청했고, 당선자도 ‘임기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용문~홍천 철도 유치 건의서에 2만5000명이서 명, 청와대, 국회 등에 전달했다. 주민들은 용문~홍천 철도 유치에 반영된 적이 있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시급 임기내 지역현안해결 주목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강원연구원은 이 노선이 수도권 주민들에게 더 큰 수혜를 줄 수 있어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발표했다. 홍천은 22대 총선 때 행정, 영월, 평창지역과 선거구가 갈라질 가능성이 높아 다지출신 당선자가 홍천을 소홀히 할 것이라는 소외의식이 많다. 당선자의 홍천지역 공약 이행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이를 불식시키는 것은 당선자가 홍천지역에 관심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야 의원 임기내 열리는 지방선거와 대선 때 좋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권재혁

“경원선 복원공사재개”

철원 철원군은 접경지역인 10개시·군중가장 긴 길이의 철책선을 지니고 있는 명실상부한 최전방 지역이다. 지난해부터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이동배치가 본격화하면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어 지역 소멸위기까지 거론되는 곳이어서 중선공약(空約)이 공약(空約)으로 끝나면 안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이다. 주민들은 당선자에게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의 철원연장을 비롯해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 현재 중단된 경원선 복원공사의 재개 등 접근망 확충과 개선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주문했다. 최문순 도지사가 도 역점추진사업으로 제시한 남북협력역 도대로 한 평화지역산업단지의 추진도 국회의원 당선자가 협력

접근망 확충·개선 절실 평화지역산업 추진 기대 해 임기내 해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농업군인 철원은 전국 최고 품질의 오대쌀을 생산하고 있지만 식생활 문화의 변화 등으로 매년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 수매가도 변동이 심해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도 희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이동배치로 비어 있는 지역내 군부대 유휴부지의 활용 방안도 시급한 과제이다. 윤여왕 군이 장연합회장은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인호

“국방개혁 대책 마련”

화천 화천지역 주민들은 국방개혁에 따른 사단해체 반대를 요구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접경지역 특별법을 더욱 구체적으로 개정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해마다 감소하는 인구 감소 대책에 대해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제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등 재조정도 절실한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지역 발전의 기폭제로 기대를 모는 춘천~속초 동서고속

사단해체 반대 여론 고조 인구감소 극복 방안 필요 화천도 조기 추진은 주민들의 공통된 바람이다. 한상열 화천도고미마을 운영위원장은 “정부차원의 거시적인 정책도 필요하지만 농촌 마을의 소득증대와 활성화를 위한 세심한 정부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각 개별농가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웅 화천시장조합장은 “한 달 벌여 한 달 먹고 사는 지역상인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구체적인 정책이 시행되길 바란다”며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수영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바란다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

양구 춘천 북부지역과 철원·화천·양구 지역이 한데 묶여 탄생한 선거구 춘천·철원·화천·양구를 선거구에서 양구지역 주민들은 국방개혁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선거구의 당선자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경우 지역 내 주요현안 해결에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에서는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해체 등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과 군장병 위수지역 부활, 태풍사격장이전을 통한 대규모 리조트 개발, 국도46호선 양구~춘천 구간 4차선 확장 등을 꼽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국

군 유휴부지 무상양여 촉구 국도46호선 4차선 확장 건의

방개혁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방개혁에 따른 피해지역 특별법 개정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수준의 지원, 유휴부지 무상양여 등을 요구하는 한편 위수지역 부활을 통해 군장병들이 외출·외박시 지역에 머물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도46호선 양구~춘천 간 4차선 확장에 대한 당선인의 노력도 주문하고 있다.

박경만 중앙통 상가변영회장은 “위수지역을 부활하면 전쟁 등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현철

“동서고속철 조기완공”

인제 인제지역 주민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서영동권인 속초시·고성군·양양군과 합쳐지면서 국회의원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다.

생활·문화·면적, 역사성과 지역 대표성을 도외시한 정치적 결정에 따른 ‘정치 희생양’이라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상존하는 가운데 지역소외라는 악순환이 지속되지 않고,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동과제를 향한 역량결집을 위해서는 ‘당선자-지자체-주민’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대두되고 있다. 인제지역의 경우 철도·도로 등 SOC 확충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동서고속화철도(춘천-인제-속초) 조기완공 예산확보와 복선화 추진, 국도31호선 대체 노선 신설, 국도44

철도·도로 등 SOC 확충 국제평화도시 기반 마련

호선 활성화 대책 마련 등에 적극 나서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국호31호선인제IC-기린-원통을 연결하는 대체도로 신설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도·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안에 선정,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면서 오는 2026년으로 예상되는 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조기 완공을 바라고 있다. 평화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설악산과 금강산을 잇는 국제평화도시 건설을 비롯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과 지역 최대 자원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도 지역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진교원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바란다

“폐광지 대체산업 유치”

태백 국내 석탄산업 1번지인 태백은 폐광에 따른 대체산업 유치 등 산적 현안 해결과 발전 방안 모색이 시급한 지역이다. 지난 1950년 11월 개광한 장성광업소는 지역경제의 핵심축은 물론 지역, 협력업체 포함 직원 1000여명, 가족까지 더하면 3000여명에 달하는 지역 최대일터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석탄공사 산하 광업소의 연차별 감산과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원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았다. 이후 직원 감원에 따른 경기침체 등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년내 폐광하는 장성광업소에 대한 장기가행과 대체산업 유치 등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

제천~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조기착공과 국도38호선 완전 개통 등

구조조정 방안, 부작용 현실화 교통망 확충·교정시설 신속 열악한 강원남부권 교통망 확충도 풀어야 할 과제다. 지난해 10월말 유치가 확정된 1500명 수용 규모의 교정시설 신속사업 및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기숙사, 노인요양사업 등 강원랜드 대체사업도 이른 시일내 완공돼야 한다.

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 철회, 폐특법 연장 및 폐광기금 납부를 상향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지역사회는 “폐광에 따른 경기침체 상황이 수십년동안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공약사항을 비롯 지역현안 및 숙원사업을 반드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우열

“상수원보호해제 긴밀협약”

횡성 21대 국회의원 홍천·횡성·영월·평창선거구의 ‘캐스팅 보트’지역으로 꼽히는 횡성 지역주민들은 선거기간 TV토론회에서 후보자간 설전을 벌인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횡성~원주에 걸쳐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은 횡성의 균형발전과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점에서 환경부, 강원도, 원주시와의 긴밀한 협력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강원도형 일자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기차 생산 이도빌리티 클러스트 조성도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회도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40여년간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군항공기 소음 대책도 풀어야 할 과제다. 소음피해에 따른 정부보상을 담은 관련법이

전기차생산클러스트 조속 정착 동해안~신가평 송전선 해법도 제정됐지만 자칫 제2의 개발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송전탑이 설치된 횡성지역에 신규 가설될 예정인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해법을 찾아야 할 상황이다. 또 새로운 성장동력 단지로 기대되는 목계리 옛 군부대의 개발계획도 새로 선출된 횡성군수와 함께 국·도비 지원이 보장된 미래산업을 발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권용준 횡성군변영회장은 “당선자는 정파를 떠나 군수와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현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바란다

“동서고속도 조기착공”

영월 영월 주민들은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지역위상 추락을 실감했다. 기존 태백과 영월·평창·정선 선거구에서 지난 20대 총선을 통해 횡성군이 추가된 데다 이번에는 태백과 정선이 분리되고 지역적·정치적으로 상당히 거리가 먼 홍천군이 편입돼 허탈감과 출대감이 증폭됐다.

따라서 주민들은 차기 총선에서는 어떻게든 태백과 정선과의 선거구 복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 현행 4개 선거구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인 만큼 각종 현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선 순위에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4개 군 균형 발전을 우선 정책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KTX개설로 교통망 확충 폐광지 경제활성화 필요

당위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 중앙의 동서를 잇는 물류·관광 정책 전략화를 통한 폐광지역 대체산업 활성화 및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동서고속도로의 제천~영월 조기 착공을 손꼽는다.

이와 함께 제천~영월 태백선 고속화 철도(KTX) 개설로 수도권 접근성을 개선하는 교통망을 확충하고 미래의 신성장 동력인 드론산업 메카 영월로의 발전을 위한 산·학·연단지 조성 및 관련 기업 유치, 폐특법 연장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반드시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방기준

“올림픽유산 진전 필요”

평창 평창군은 평창동계 올림픽 이후 진전되지 않고 있는 올림픽 유산사업의 추진과 지역 접근망 개선을 위한 도로망 확충, 농업과 농축산업의 활성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창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림픽 유산사업은 올림픽 이후 평창평화포럼과 평창평화뮤지컬페스티벌, 평창 평화봉사단 등의 사업은 이뤄지고 있지만 피부에 닿는 가시적인 사업은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올림픽플라자 부지를 활용한 올림픽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지난해 국비예산 26억 6000만원을 확보해 올해부터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모두 436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 조기

사업비 신속하게 확보해 접근망 확충·관광객 유치에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올림픽의 수혜에서 소외됐던 남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국도 31호선(방림~장평), 국도 42호선(안흥~방림)의 개선으로 접근망 확충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는 것도 시급한 현안이다. 주민들은 접근망 개선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남부권 개발과 지역주력산업인 농축산업의 활성화, 청정산림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신성장동력 창출, KTX 평창역과 진부역의 역세권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관광과 경제활성화도 당선자가 평창군과 힘을 합쳐 해결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신현태

“알파인경기장 존치”

정선 정선은 이번 총선 선거구 획정으로 생활권이 다른 영동남부권역에 편입되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를 넘어 무관심지역 전락까지 우려되고 있다. 게리맨더링 논란을 빚었던 선거구에 포함된 정선은 인구수도 지역구 4개 지자체 중 가장 적은 만큼 이같은 여건이 산적한 지역 현안과 주민 숙원 프로젝트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당선자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2018 동계 올림픽 알파인경기 개최도시인 정선은 유일한 유산인 가리왕산 ‘정선알파인경기장’ 합리적 복원이 공전을 거듭하며 주민들의 마지막 자존심인 곤돌라 안전 존치도 힘겨운 실정이다. 지역커뮤니티는 가리왕산 복원을 준비

청소년올림픽 시설 활용 폐광지 지원법 개선 필요

하는 3년 동안 곤돌라를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시 시설 활용도 희망하고 있다.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올림픽 유산의 연계도 제안하고 있다. 또 오는 2025년 중요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장은 물론 부칙의 적용시한 조항도 삭제해 연장 논의를 반복하는 소모적 논쟁방지를 바라고 있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의 바로미터인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방식을 개정하고 산정기준도 개선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윤수용

설악권 4개 시·군 결집

속초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는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등 지역별 대표적인 숙원사업을 비롯해 그동안 성과가 미미한 각종 현안 사업이 산적해 당선자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속초의 경우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을 비롯해 수산업 쇠퇴·관광산업 인프라 확대 방안 마련 등이 당선자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특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2016년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됐지만 4년이 지나도록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들의 분노가 큰 상황으로 연내 착공을 비롯해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길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최근

동서고속철 조기착공 과제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지역에서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20년만에 설악권으로 선거구가 뿔뚝 났던 다시는 분열되지 않도록 인구 증가 정책을 비롯해 4개 시·군이 설악산 등 각종 자원의 공동 활용은 물론, 모든 분야에서 공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을 아우르는 역할이 필요하다.

주영래 속초시변영회장은 "무엇보다 선거로 인한 갈등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며 "지역발전에 온몸을 던진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박주석 jooseok@kado.net

금강산 관광 재개 우선

고성 고성지역은 금강산 관광 재개가 최우선 과제이다.

또 철도·도로망 확충, 인구 감소문제 해결 등 현안이 산적해 주민들이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금강산관광 중단 10년을 넘기며 지역경제적 피해가 4000억원을 넘어섰다. 지역국회의원이 정부,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장기화되고 있는 지역경제 침체를 해소할 돌파구로 인식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길 바라고 있다. 또 남북평화협력 단초로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연결, 동해고속도로 간성 연장, 국도 46호선 용대-간성 확장 등 교통망 확충도 중요과제로 꼽히고 있다.

남북평화협력 단초 마련 고령사회 인구위기 해결

고성지역은 초고령사회로 인구 2만7000명선 붕괴가 우려되고 있어 지자체, 군의회, 주민들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어획 부진으로 신음하고 있는 어업인을 위한 지원 확대와 농특산물 판매 대책 수립 등 주민 삶 개선에 관한 고민과 활동도 요구되고 있다. 이강훈 고성군변영회장은 "우리정부가 말로만 금강산관광 재개를 말했을 뿐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게 없다. 동해선 연결이라는 행동을 통해 북측이 교류의 장으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동명 ldm@kado.net

공항·서핑 인프라 구축

양양 설악산과 동해바다가 어우러진 양양군은 최근 플라이강원이 취항하고 서핑이 급부상하면서 이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 어렵게 취항한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쇼크로 제대로 날아보지도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KDB산업은행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저비용항공사에 대해 긴급 운영자금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으나 대출 기준을 항공사 3년 운항실적을 조건으로 하면서 영업실적이 3개월 뿐인 플라이강원은 배제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

플라이강원의 비상(飛上)

플라이강원·관광 활성화 좌초된 오색케이블카 과제

은 그동안 침체 일로를 걷던 양양국제공항과 강원관광 활성화 등 강원도의 로드맵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당선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또 지난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좌초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설악산 오색지구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흘림골탐방로 재개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도 반드시 필요한 현안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최훈 choihoon@kado.net